

기획연재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 대학주보는 이번 학기에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연재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총5회에 걸쳐 살펴본다.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하고 다단한 문제들에 대해 차근차근 고민해보는 동시에, 옆 나라 일본의 대학원은 어떤 모습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현실과 비교점을 해본다.

연재순서

- ① 총론-대학원의 위기
- ② 장학제도
- ③ 연구지원 시스템
- ④ 외국인 학생선발 시스템
- ⑤ 대학원 조직문화

부당처우 경험한 대학원생 63.6% 참고 넘어가 학생 '생사여탈권'을 교수가 가지고 있는 구조 원인

기획연재⑤ - 대학원 조직문화

최승우 기자 dotori14@khu.ac.kr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기회로 삼자' 연재기획에서 앞서 다룬 문제들은 '교육여건'이나 '연구환경'의 문제임과 동시에 대학원생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도 닿아있다. 신진연구자 혹은 그 과정에 있는 존재로서 대학원생을 이해하기 보다, '하위존재'로서 접근하는 일이 잦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여러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청년위원회는 대학원생 2,354명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인권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학원생 45.5%가 '대학원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부당처우의 유형은 언어, 신체·성적 폭력, 사적 노동, 저작권 편취 등 다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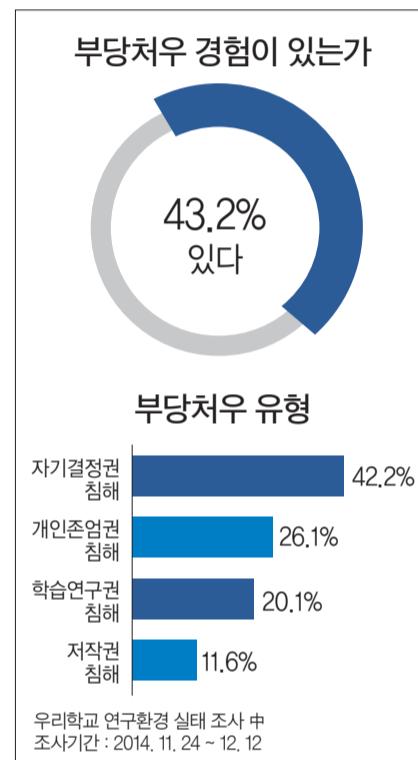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작년 11월에 실시한 연구환경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대학원 수료생 및 재학생 259명이 참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전체 응답자의 43.2%가 '부당처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당처우의 유형은 '자기결정권 침해'가 42.2%로 가장 높았고, '개인존엄권 침해', '학습연구권 침해' 등이 각각 26.1%, 20.1%로 뒤를 이었다. 또 부당처우를 당하고도 63.6%는 이를 알리지 않고 참고 넘어갔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

대학원의 여러 문제는 대학원생을 대하는 인식의 문제와 달라있다

한 응답자는 7.3%에 불과했다.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박진홍 회장은 "부당한 처우를 겪은 원우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대학원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자신이 속한 연구실이나 프로젝트에서 교수님의 눈 밖에 나면 더 큰 불이익이 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부당대우 사례를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두드러진다. 학생이 계획 중인 논문 계획과 주제를 지도교수가 가로



채거나 연구에 많은 부분을 학생이 담당했지만, 논문에 이름을 넣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도교수가 자신의 집까지 개인적인 일로 호출하기도 한다.

대학원에서 이런 후진적인 인권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박 회장의 지적대로 '대학원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학원의 특성상 자신을 지도하는 교수가 연구 프로젝트 및 학위 심사 등 자신의 밑에 있는 대학원생의 절대적인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렵다. 일반대학원 설문조사에서도 부당처우에 침묵한 이유에 대해 57.8%가 '학점, 졸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학원에서 흔히 있는 문제로 치부하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의 사례만 살펴봐도 대학원생은 교수의 '연구 조력자'로서 인식된다.

도쿄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체연 양은 "교수님이 자신의 연구에 관한 일을 학생에게 시지했을 때는 연구비 처리를 통해 그 대가를 지급한다"며 "교수님의 경우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시키는 교수 입장에서도 받는 학생 입장에서도 미안하거나 섭섭한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일본의 경우 지도교수와 제자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이 아닌 '규정'을 통해 정당한 보수를 주고 받는다.

대학원과 일반대학원 학생회 측에서는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 '대학원 공동체문화 및 대학원생 인권보장 개혁안' 발표했다. 개혁안 내용을 살펴보면, '교수-학생-교직원이 참여하는 인권 공개토론회 학기 당 1회 개최'·'사례별 연구환경 및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대응 매뉴얼 개발'·'대학원에 상시 상담인력을 배치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시 대응할 수 있는 인권센터인 대나무숲(가칭) 설립'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대학원생은
'연구조력자'로 인식된다

일반대학원 송재룡 원장은 "학생-교수 간의 어디까지가 인권이고 교권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학원생의 인권문제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를 이끌어 담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혁안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당대우가 만연한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혁안이 도출되고 100일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인권보장 개혁안을 주도한 박 회장은 "학기 중 다른 사업에 바빠 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방학 중 대학원생 인권보장에 관한 교수의회·학생회가 함께하는 선언문 작성은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비(R&D) 부정수급 신고 안내

신고 대상

연구개발비(R&D) 유용, 횡령, 부당집행 등 부정사용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연구비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 제출
- 연구기자재, 재료비 구입비 부풀리기 등

신고 상담

전국 국번 없이 ☎ 110



신고 접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 홈페이지 : www.acrc.go.kr
-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 팩스번호 : (02)2110-0678
-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 처리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2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